

투데이칼럼

북한의 자폭 드론 개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드론 성능 시험을 잇달아 참관하며,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북한이 자폭 드론 개발과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도 공격 드론을 다양화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곤 있지만, 북한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러시아 전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의 AI 드론이 곧바로 공격을 감행했다. 방해 전파로 인간의 지시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스스로 목표를 찾아내 타격을 결정했다. 이처럼 AI가 접목된 전투용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그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모든 과정을 인간이 조종했던 기존 드론과 달리, AI 드론은 신호가 끊겨도 자체 추적과 조준, 공격이 가능해 효율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인명 살상 여부를 AI가 판단하는 것이라서 윤리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은 무인 항공기술 연합체와 탐지 전자전 연구 집단의 국방과학 연구 사업을 지시했다. 최근 북한은 자폭형 드론으로



정복규
논설위원

한미의 전차와 장갑차 등을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드론들에 새 AI 기술이 적용됐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군사적 효과성과 전략적 가치는 중요하다. 북한이 모자이크한 사진만 공개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미 군사 장비 외형을 AI 드론에 학습시켜 공격하게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표적이 사람인지 혹은 건물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지형지물과 인공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진 갔다. 엔비디아 등 여러 회사에는 드론에 쓸 수 있는 최소형 AI 칩들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드론 관련 시찰을 찾아가 전력 증강을 독려

했다. 하루빨리 계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들어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 북한이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최근 전장터에서 드론의 효용성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기종을 다양화하고 있는 자폭 드론은, 압도적인 가성비로 지너 '가난한 자의 순항 미사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드론을 보면 십자 날개가 달려있는 러시아 아제 란체와 형태가 매우 비슷하다. 란체의 가격은 1기당 약 3천만 원이다. 지난해 말 무기 전시회에서 포착된 골판지 드론의 제작 비용은 대당 약 200만 원에 불과해 가성비가 더욱 뛰어나다. 특히, 골판지 드론은 종이 재질이라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드론을 미사일로 섞어 공격할 경우,

대응 수단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2년 말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침범한 이후, 우리 군도 드론 전력을 증강하며 운용 기종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해 폴란드산 자폭 드론인 '워메이트' 200대를 구입하고, 골판지 무인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S2 드론 등 소형 자폭 드론도 일부 배치했다. 하지만 드론 전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북한에 비해,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가성비가 높은 공격용 드론에 집중하는 북한과 달리, 우리 군은 고성능, 중대형 정찰 드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평가도 있다. 북한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조종하지만 위력적인 FPV(1인칭 시점) 개조 공격 드론이나 상용 드론을 개조해서 수류탄이라는가 무기를 단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입증된 광섬유 드론 혹은 앞으로 나오게 될 인공지능 드론 같은 경우 드론을 직접 요격해서 전자전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도 요격할 수 있다. 요격 드론에 대한 개발이나 배치가 확증돼야 하는 게 급선무다.

사설

중국, 미국에 맞설 관세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맞불 관세를 천명했고, 대만은 직격탄을 맞은 자국기업들에게 돈을 풀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34%의 상호관세를 매기자, 중국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4월 10일 낮부터 발효된다. 중국CCTV뉴스는 "미국 관세 발표는 WTO 회원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해치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과 세계 경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보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필수 광물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했다. 중국은 전 세계 가공 희토류의 90%를 생산한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돼 광범위한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인수에도 제동을 걸었다.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안 승인을 보류했는데, 향후 협상에서 틱톡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이 틱톡 매각에 협조하면 관세를 인하해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에게 진화를 걸어 관세에 불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틱톡 승인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하려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대만은 관세 직격탄을 맞은 기업에 약 4조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와 전화 협의를 할 예정이다. 상호관세의 적용을 받게 되면 한국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은 25%까지 올라간다.

경제부총리의 국채 매입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본회의와 함께 열린 긴급현안질에서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을 상대로 '최 부총리의 미 국채 소유가 이해충돌인지 검토했느냐'고 질문했다. 당시자인 최 부총리는 현안 질의에 불참한 탓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공개된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0년 만기 미 국채 24원 가량을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결과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23 내란 사태로 환율이 치솟은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김 차관은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2024년 중반 정도에 매

입을 했다"며 "달러를 신규로 취득해 미 국채를 샀다면 이해충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구입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경제수장이 환율 급등 상황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상 외환위기에 베풀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샀다는 것은 매우 교의적이고 굉장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만일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성주간 세족식, 어린이 발 씻겨 주는 대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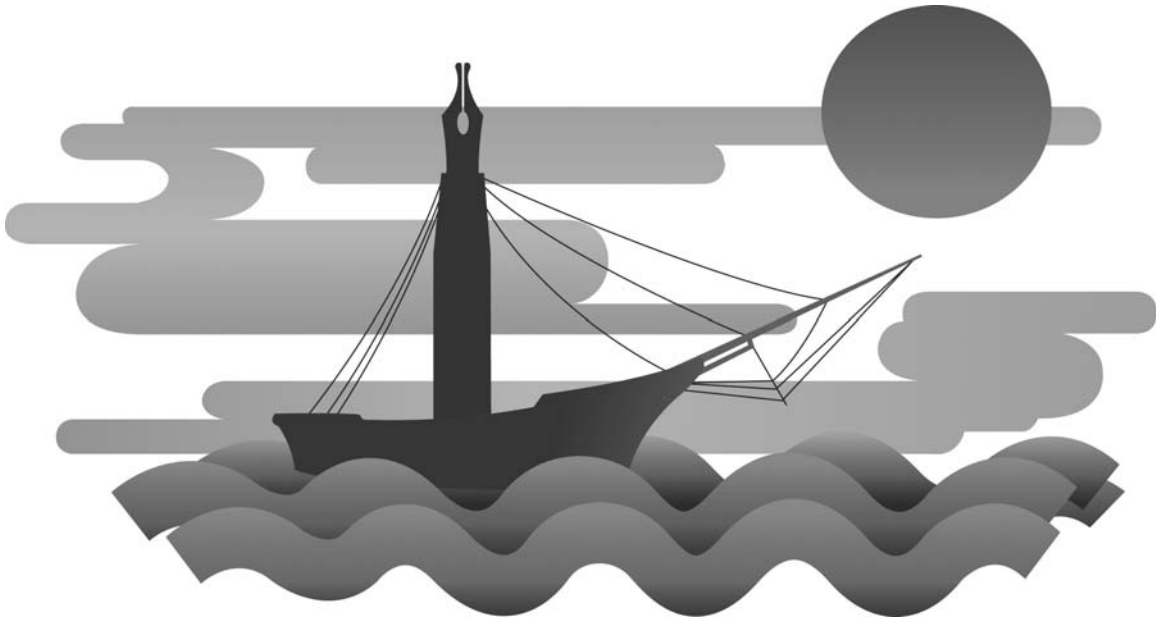


지난 17일(현지 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아르메니아 대성당에서 성주간(Holy Week·고난주간)을 맞아 가톨릭 성목요일 예배 중, 이라크 출신의 대주교(왼쪽)가 한 어린이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

“우리 교육을 수호하자”



지난 17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교(UC) 버클리 캠퍼스에서 '고등교육 행동의 날'(Day of Action for Higher Education) 시위가 열려 한 학생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